

다산포럼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글로벌’ 새마을운동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른 밀어붙이기에 대다 어린이에서조차 마지못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사실 역사학자의 90%를 좌파로 몰아붙이고 전국의 고등학교 99.9%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강변하는 무리한 행태가 어디까지 통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국정본을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한 데서 보듯이 여기에는 기독교의 지배 체제를 영속화하려는 집권세력이라고 강변하는 무리한 행태가 어디까지 통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국정본을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한 데서 보듯이 여기에는 기독교의 지배 체제를 영속화하려는 집권세력이라고 강변하는 무리한 행태가 어디까지 통할지는 미지수다.

것이 아니다.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행이 가능한 데는 공문장인 언론이 종편으로 대변되는 황색 저널리즘의 온상이 된 현실이 있다. 비판적 지성의 산실인 대학은 어떤가? 현재 대학은 국가권력과 자본의 통제로 그 본령이라고 할 자율성의 공간이 축소될 대로 축소되어 있다. 언론과 대학이 왜곡되거나 죽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횡포는 그것을 딛고 더욱 거세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드라이브를 통해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이면에는 공문장을 손아귀에 넣고 있다는 집권세력의 자신감이 배어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박정희 시대의 치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글로벌 변화’하라는 움직임이 정권 차원에서 노골화되어 온 것도 이 맥락에서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복원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세계화하는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9월 미국방문 시 유엔본부 연설에서 “선진개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성공 요인이든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국민과 나라를 바꾸어 놓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현

재진행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임에 동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새마을운동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은 교육’이라고 화답하면서 이 운동의 국제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을 국내에서 복원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이들의 기도는 시대착오이자 과대망상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지 산업화시대의 철 지난 사업을 되풀이하려는 것보다 그 정치적 함의를 극대화하는 방향, 즉 보수정권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싸움의 터로 활용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새마을운동은 자조와 협력을 내세웠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면 된다’ 식의 군인정신에 접맥된 국가주의적 인간 개조를 그 사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 70년대 초 농촌의 환경 개선에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농가소득 증대라는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1973년부터 시작된 유신체제의 농촌 하부조직으로 활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마을운동은 곧 10월 유신이고, 10월 유신은 곧 새마을운동”이라는 박정희 자신의 선언에서도 이는 분명하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핵심 요소인

‘새마을 교육’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토대로 하는 유신체제의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음도 환기된다.

대한민국의 밝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배우게 해야 한다는 국정화 논의의 한 중요한 예가 새마을운동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론조사에서 역대 한국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으로 꼽힌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일 뿐더러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효과지만 국가주의적 인간상을 주입하기에 이 운동이 가장 적합하겠기 때문이다.

확일화된 역사 해석을 강요하는 교과서가 ‘올바른’ 것이 될 리 없고, 산업화시대의 개발독재 모델이자 관 주도의 인간 개조를 앞세운 새마을운동이 ‘글로벌’의 미를 가질 리 없다. 학문체제도 서 있지 않은 ‘새마을학’으로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영남대의 촌스러운 행보가 학계의 빈축을 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얼핏 무리해 보이는 집권세력의 이 시도가 장기적인 보수정권 창출을 위한 이념화 기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비판도 내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社說

전일빌딩 활용 정부 지원 없인 불가능하다

‘광주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던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이 애물단지 처지에 놓여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인접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빛이 바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빨리 손을 써야 한다.

전일빌딩은 지난 2011년 경매 물건으로 나온 뒤 광주도시공사가 138억 원에 매입했지만 용도를 정하지 못해 관리비만 축내고 있다. 지난 6월엔 광주시가 문화전당에서 만든 콘텐츠를 아시아 전역에 내보내는 방송국인 ‘아시아문화 채널’로 활용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문방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무산됐다고 한다.

4년이 흐르는 동안 매년 수억 원을 지출하며 재정 압박에 시달려 왔던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 등이 재매입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결과 건물 자체는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예산이 걸림돌이다. 건물을 되살리는 비용과 40억 원 안팎의 보수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최소 200억~3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광주시 등 지자체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립 문화전당과 조화롭게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게 타당하다. 그동안 미디어문화센터, 문화창작지원센터, 전당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만큼 빌딩을 잘만 활용한다면 전당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역에서도 해법 모색에 같이 힘써야 한다. 광주시를 주축으로 정치권, 문화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안을 찾는다면 전일빌딩과 문화전당을 함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운영 조사를 내년 초에 발주해 7~8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전당을 보완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을 정하는 등 확실한 명분을 제시해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20년...아직 요원한 자율과 분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를 열고 지방분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정책 전당대회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뿌린 내린 지방자치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표는 개회식에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중앙과 지방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며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기본법 제정에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행 8대2에서 6대4로 조정 △지방소비세율 20%까지 단계적 인상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것은 없지만 절실한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인프라는 대폭 개선됐지만 지방자치체계가 처음 실시된 1995년 63.5%였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3%로 떨어졌다.

게다가 지자체들은 최근 시행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으로 인해 늘어난 복지예산 부담 때문에 파산 위기에 봉착했다. 따라서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과 보육사업 등의 국고보조를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아직도 지방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으며, 외연위기가 이후 그 정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지자체의 부채는 결국 국가 전체 재정 부담으로 확대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말뿐이다. 지역 간 소득불균형과 행정개혁 미흡, 중앙과 지방 간 세원 불균형 등은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NGO 칼럼

건강한 녹색도시를 위해



김영대 한새봉두레 사무국장

낮으로 베어진 벼는 건조되면서 휴면기에 들어간다. 벼는 잠에 빠져들며 씨앗이 되는 꿈을 꾸다. 또 벼는 잠에 빠져들며 그 무엇의 생명을 잇는 에너지가 되는 꿈을 꾸다. 우리 매 끼니 한 공기의 밥을 바라보며 벼의 꿈을 공감해볼 일이다.

우리를 활동하게 하는 에너지원인 밥에 대한 이야기다. 100g의 밥 한 그릇은 벼 세 포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또 벼 세 포기가 자라는 데서 울쟁이 35마리가 자라난다. 밥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셈이다. 한새봉 개구리는(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민조직인 한새봉두레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이 모여 벼농사를 짓고 있다)에서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나고 있다.

한새봉 개구리는은 용전늪을 사이에 두고 영산강과 인접해 있다. 개구리논에 오는 원앙과 고라니, 백로들이 영산강에서 용전늪을 거쳐 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전늪은 개구리논과 영산강을 잇는 중요한 생태통로이다. 이러한 생태 연계

체계가 녹지를 보전하고 증진하는 키워드임은 행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가 영산강 주변의 농경지를 활용해서 하천과 전방 녹지, 주변 공원녹지와의 연계체계 강화를 구상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최근 광주시에서 개구리논 일대를 한새봉 농업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 한새봉 근린공원 내 논 습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다. 2008년 제10차 랍사르 총회에서 ‘논습지 결의문’이 채택(논이 습지로 채택된 가장 큰 이유는 논이 생물다양성 때문)되고 난 후 광주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다.

그러나 이 최초의 일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시는 공원 조성만 해놓고 이후의 관리·운영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하나의 공원녹지 연계지점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 알리고 보전하는 데 힘을 써 줬다면 그것들을 엮는 것은 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 줘야 한다. 관에서는 개구리논이 도시공원이라는 이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한새봉 농업생태공원은 여기서 더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새봉 농업생태공원은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공원이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이 광주시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거이다.

광주는 도시별 도시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우리나라 7대 광역시 중 꼴찌다. 꼴찌인 이유는 평가 자료가 없어 ‘0’점 처리된 지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0’점 중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역량’과 ‘참여와 파트너십’은 눈여겨볼 일이다.

민관협력력을 통해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관리·운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과정이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역량’과 ‘참여와 파트너십’을 배양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광주의 녹색도시 건강성을 높여줄 것이다.

기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



안용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하고, 다른 편에서는 숙박업소 난립이 교육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한다. 이처럼 규제는 좋고, 나쁨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개혁이며, 보다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다.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가 누리는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를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공의 영역이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며 때로는 규제에 찬성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때로는 반대하거나 완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광주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용을 유발하고,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운동에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동참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반대로 광주시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경험이다. 2015 광주주거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은 성공한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대회를 개최한 국내·외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을 개발하여 선수촌을 건립하였지만, 광주는 이와 반대로 도심의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선수촌으로 활용한 사례는 세계 최초이자 성공사례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여부는 기업 규제 완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기업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도시민과 함께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구조 속에서 도시재생은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그 자체를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 어떤 규제가 왜 필요한지 혹은 왜 불필요

한지 그리고 개혁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의 문제인 것이다.

지역 불균형 발전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명분인 것처럼, 낡은 도심의 실속 있는 재탄생이 기업 규제 완화 찬성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는 더 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규제의 입안과 적용 실행은 공적 영역에 속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객과 시민, 기업의 입장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규제개혁에 그 고민을 녹여내야 한다.

광주시 역시 규제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실·국 혹은 과 단위의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또한,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교수, 기업가, 관련 전문가, 시민대표 등을 규제개혁지원단, 규제개혁위원회에 적극 참여·유도하여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눈높이가 시민에게 맞춰져 있느냐에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졌을 때 공공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담보되기 때문이다.

無等鼓

조선시대 때 사고(史敍에서 서적을 점검하고 거품(擧擧)을 시키던 임무를 맡은 ‘포쇄관’이라는 벼슬아치가 있었다. 포쇄는 실록 등 기록물이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거나 책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책을 모두 꺼내 그늘에 펼쳐 놓아 바람을 쏘이고 벌에 말리는 연중행사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8년(1543년) 8월 15일자에는 ‘포쇄하는 임무를 사사로 온 인물에게 말긴 춘추관 당상에 대해 전교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중종은 “포쇄관에게 말을 주어 내려 보내라고

‘한서(漢書)를 흠이불 위에 늘어놓고 ‘논어’를 병풍 삼아 황소바람을 막으며 얼어 죽는 것을 면하기도 했다.

미침내 그는 39세 때 벼슬길에 오른다. 정조 임금이 그를 규장각 문서 정리나 자료 조사를 하는 검사관(檢書官)으로 책임을 맡기고 벌에 말리는 연중행사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8년(1543년) 8월 15일자에는 ‘포쇄하는 임무를 사사로 온 인물에게 말긴 춘추관 당상에 대해 전교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중종은 “포쇄관에게 말

책벌레

을 주어 내려 보내라고 한 것은 실록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었다. 그런데 사사로이 아내를 얻는 일로 말미를 받아 내려가는 사람에게 포쇄의 임무를 맡겼으니, 일의 체모에 어그러지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책벌레는 책에 생기는 좀벌레다. 지난해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책벌레’로는 이용후생파(利用厚生派) 실학자 이덕무(1741~1793)가 꼽힌다. 서얼 출신이었던 그는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기에 처절한 가난 속에서 책 속에 묻혀 살았다. ‘맹자’를 팔아 쌀을 마련하기도 했고, 엄동설한에

이야기책을 다 보려 한다”며 책 욕심을 드러냈다.(정민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 중)

최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 명을 돌파했다. ‘손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은 정보검색과 음악 감상 등 새로운 차원의 활동이 가능한 반면 ‘디지털 치매’ 확산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 읽기와 글쓰기 등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요즘은 책벌레가 생겨 좀이 쑤 환경을 아니다. 이제 ‘책벌레’ 수준까지 아니어도 색 바래고 손때 묻은 책들을 다시 꺼내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